

한국 근현대사와 기록-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관련 국내 자료의 종류와 성격

안 정 애*

1. 들어가는 말
2. 베트남전 파병 관련문서의 현황과 실태
3. 맺는 말

주제어 : 베트남 전쟁, 베트남전 파병, 파병관련 문서, 청와대, 국방부, 국회, 외무부

1. 들어가는 말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파월한국군이 ‘십자군’¹⁾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의 용병’²⁾이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베트남 현지³⁾와 우리네 기존의 관변 평가는 엄청난 간극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사이공 함락으로 막을 내린 통상 30년 전쟁이라 불리우는 베트남 전쟁 기간 중,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 6개월에 걸쳐 한국은 연인원 325,517 명을 파견하였으며, 5천 여명이 전사하였고, 현재 보훈처 등록 고엽제 환자⁴⁾만 8,700 명에 이르고 비공식적으로는 10,000 명이

*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 1) 국방부측 자료는 모두 이 시각에서 쏘여지고 있다. 즉 “월남전은 오늘날 월남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동남아의 전자유 제국이 공산세력에 대항하라는 전쟁이며, 공산침략의 뿌리를 뽑아 동남아의 평화회복과 세계평화의 달성을 위한 **십자군의 임무**를 다하는 역사적인 전쟁”(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 전사 제 1권](1967), 60쪽. 강조는 필자).
- 2) 파월 한국군의 용병 주장은 파병 당시부터 함석헌 옹을 비롯한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1995년 5월 10일,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숙희 씨에 의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김 장관은 국방대학원 초빙 강의에서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전쟁이었고, 월남전은 용병으로 참전해 명분이 약했다”는 발언으로 각계의 보수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한 바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만행” 기사가 한 언론에 의해 소개된 후 이를 계기로 베트남전 참전 재조명 세미나(2000. 12. 15)가 열려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사건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용병 성격의 파월한국군이 연구 발표되기 시작했다. 한홍구,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그 빛과 그림자,” 강정구, “한국군 베트남 전쟁 참전과 베트남 민간인의 참상”
- 3) 전쟁 사료를 보관·전시하고 있는 민던성 박물관 향미구국전시관에는 한국군 맹호부대의 작전 수행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양민 최대 희생지역인 파이빈 사의 고자이 위령탑에는 “미 조종을 받는 남조선 폭두각시 군대들이 380 명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만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 기록으로 갖고 있으면서 현재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도이모이’정책, 즉 ‘과거를 접고 미래로 나간다’고 외치는 베트남정부의 곤혹스러움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⁵⁾은 케네디나 고위관료들이 천명했듯이 명분은 경제원조와 자유우방국가의 수호였으나 실제로는 월남정권을 통한 베트남 간접지배 확보였고, 인근 공산국가인 중공 저지를 포함, 베트남에 소련 포위용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동남아전략의 표현이었다. 미국은 프랑스의 짐을 떠맡아 자유진영의 경찰국가임을 자임한 미국이 굴욕적인 패배를 저지⁶⁾하는 데 안간 힘을 쏟았다. 미국은 공산화 위협의 소위 ‘도미노 이론’을 유포시켜, 한국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 북한의 남침 운운하며 안보논리를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의 열망⁷⁾을 꺾지 못하였으며, 초기부터 뚜렷하지 않았던 전쟁 목표와 전략의 부재⁸⁾로 인해 ‘불사조 작전,’ ‘수색·소탕 작전,’ ‘초토화 작전’ 등의 거창한 미군 작전 전개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맞게 된다. 월맹군의 1968년 소위 ‘구정 공세’ 이후 국내외의 여론 악화로 인해 전쟁 개입의 부당성이 부각되자 1968년 3월 31일, 존슨 미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북폭중단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와같은 근본적인 정책변화는 새로 미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에 의해 불개입정책인 소위 ‘베트남화 정책’으로 가시화되었고 곧 이어 주월미군철수가 이어지면서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완전히 발을 빼게 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결정과 주둔, 철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박정희가 구상하고 통제⁹⁾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박정희 드라이브는 군사정권이기에 가능했다. 합법적으로 수립된 민

4) 1996. 7. 31까지 보존처에 등록하지 않은 숫자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데, 베트남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바 있는 한국은 철군 후 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에 관한 법률을 마련(1993. 3) 뒤늦게 정부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고엽제는 살포는 철저히 미국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즉 작전필요에 의해 주월미군이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무려 10년동안 2천만 갤런(1갤런=3.785L)을 살포하였는데, 미국 뿐만 아니라 참전국가인 호주 및 뉴질랜드 참전자들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보상에 합의한 바 있으나, 한국은 제외되었다.

5) 중군기자였던 마이클 매클리어는 미국방장관 클라크 클리퍼드의 말을 일부 인용, 베트남전쟁이 ‘목표와 전략이 없었던 전쟁,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전쟁’으로 결론짓고 있다. [베트남 10,000일의 전쟁](을유문화사, 2003). 이 책에서 미군사분석가 브라이언 쟁킨스도 “미국은 베트남 전사들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민족주의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신식민지주의 전쟁에 대한 베트남 민족의 ‘반미구국전쟁,’ ‘항미구국전쟁’으로 규정되고 있다

6) 맥도른 미국방차관보가 작성한 ‘남베트남에서의 행동계획’에 따르면, 남베트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자유스러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10%에 불과하며, 남베트남이 붕괴하더라도 우수한 의사가 최선의 치료와 노력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죽고 말았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국방비밀문서 자료, 1964. 9. 3/1965. 3. 24). 재미있는 것은 김성은 국방장관이 한국군 전투사단의 추가 파견 결의를 위한 국회동의 요청 발언에서 “월남파병이 죽어가는 환자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지 않고서는 우방이 죽기 때문”(국회의사록, 1971. 7. 27)이라고 밝혀 남베트남을 ‘환자’로 동일하게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드골은 전쟁 초기에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며, “인도차이나 민중은 미국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7) 베트남인들은 미국의 개입이 ‘베트남인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한, 미국에 의한 제3세계 침략전쟁’이었다고 보고 있다.

8) 미국은 자유우방세계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25개국에 참전을 요청했는데,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구두로 요청(1965. 5월 박-존슨 회담시)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하였고, 한국 역시 구두통보라는 형식으로 이에 화답함으로 써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이명턴 청문회, 31-32쪽.

9) 박정희는 대내외적으로 반공론을 중심으로 한 명분론만을 크게 부각시켰다. “(월남파병은) 자유세계의 반공전선을

주당 정권을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미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 미국으로부터 인정 받기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케네디에게 들이밀 카드가 없었던 박정희 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고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곧 월남파병이었다.¹⁰⁾ 이후 박정희는 북한남침 가능성 상존이라는 특유의 안보논리를 이용, 이를 주한미군 월남파견과 교묘하게 연결시켰다.¹¹⁾

미국의 ‘용병’¹²⁾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문제는 그 성격 규명을 위해서도 관련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주제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이 항상 부딪치는 문제는 1차 자료의 부재이다.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월남파병의 동기와 목적, 미국와의 관계, 결정과정이 1차 문건에 의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국내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아 미국 문서에 의존¹³⁾하거나 관련자의 증언¹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베트남전 파병 관련 문서의 생산 주체는 정부를 우선 들 수 있는데,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국방부(합참, 육·해·공군 본부, 주월사령부 및 예하 부대), 외무부 등이고, 파병 관련 입법과 심의 주체로서 국회 상임위(국방위)와 본회의가 있다.

생산기관별로 자료의 성격을 살피기로 한다.

2. 베트남전 파병 관련문서의 현황과 실태

1) 청와대¹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아시아 집단안보를 촉진... 만약 월남이 공산침투에 굴복하게 된다면 아시아 전 지역은 공산위협에 처하게 될 것...대월남군사원조는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국방... (한국전쟁 때)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 16개국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져 주었다...” 사이밍턴 청문회, 32쪽.

10) State Departmen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1961-1963, XXII, North East Asia](USGPO, 1996), 536쪽. 이 문서를 통해 그동안 삭제되었던 박정희의 월남파병 제안이 공개되었다. 1961년 11월 14일 박정희-케네디 정상회담에서 박정희는 “미국의 (월남문제)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백만의 장정들이 있으며,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월남에 이런 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고 정규군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군을 모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1) 1967년 4월 17일, 대통령 선거 유세 시 박정희는 “만약에 월남에 우리 한국군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월남으로 갔을 것... 그 결과로 휴전선에는 공백이 생겨 북한에 침공 찬스를 주게 될 것...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라고 하여 주한미군 대체병력으로서의 한국군 월남파병이 불가피했음을 변명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제4집], 191-193쪽. 여기에 덧붙여 이동원 외무장관은 “월남은 전쟁터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라는 경제논리를 전개, 미국으로부터 파월을 전제로, 한국군 현대화 지원과 일체의 파월경비 부담, 한국의 월남시장 진출 보장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원, [3공 외교비화](국민일보, 1989. 12. 12/12. 18).

12) 해외복무수당 지급에 관한 협정까지 존재했으므로 ‘파월한국군은 용병’이라는 주장은 폴브라이트를 비롯한 미 의회의원들도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항이었다. 미상원의교위 [사이밍턴] 청문회(한국관계, 1970. 2. 24)(중앙정보부, [미국의 대한관계 자료집-의회 편(상)], 발행연도 미상, 8-60쪽). 미국 행정부도 한국의 파병동기가 파월대가로 주어지는 미국원조 혜택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13) 예를 들면 1965년과 1966년 3차, 4차 파병시 한·미간 합의내용은 모두 사이밍턴 청문록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14) 김성은, “월남파병”(조선일보, 1981, [전환기의 내막]). 이동원, “3공 외교비화”(국민일보, 1989, [그 역사 그 현장]), 기타 이훈섭, 정일권 회고록.

15) 파병을 토론·결정했다는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통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비서실 문서로 분류, 수집되어 있으며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다.¹⁶⁾ 파병 토론과 의결이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도 있으나 국무회의록과 국가안전보장회의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는 비서실에서 기안, 해당부서에 내리는 대통령 업무지시·협조요청·접수 보고서 형식을 띤다. 주요 보고 부서는 국방부이고, 파병이 본격화된 이후인 1966년부터 문서가 발견된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가 직접 월남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대월수출 및 용역’(1966. 3. 12), ‘회의각서’(Lodge 주월미대사 접견(1966. 5. 20),¹⁷⁾ ‘대월인력수출의 강력추진’(1967. 9. 20), ‘파월장병 전투식량(씨레이션) 생산공급을 위한 긴급부족 자금조치에 관한 지시’(1967. 10. 20), ‘파월장병의 본국 휴가시 항공수송 문제’(1969. 3. 10), 그리고 미국의 ‘월남화 정책’에 따른 철수 시기 국방부의 보고인데, 주월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한·미 합의에 따라 일부는 미군에 반납하고, 일부는 월남군에 인계하였으며, 일부는 본국으로 해상수송하는 것으로 미측과 합의하였는데, ‘주월미군 특수통신장비의 한국 이송 계획’(1970. 6. 9)은 이러한 무기이전을 보여주고 있다. ‘주월미군 철수현황 보고’(1971. 1. 7)는 닉슨 독트린 계획에 의거 69년부터 시작된 주월미군의 철수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6차(1971. 1. 1-4. 30)계획에 따르면 549,500명이었던 미군이 절반 가량인 284,000 명만 잔류하게 된다. 국방부는 주월군 철군에 관해 미국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주월군 철군에 관한 한·미 실무자 회의 보고’(1971. 10. 18)에 따르면 한국측은 미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시안을 제시하였다. 1)국군의 병력을 파월전 수준인 60만 명으로 환원 2)북귀 부대의 국내 운용 3)주월군 장비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나 군원에 관계없이 초과품 또는 장기 잉여물자로서 인수 4)철군 병력에 대한 수송지원과 해외지원비 및 복원조치비 미측 부담 등. 주월한국군의 철수 비용까지 미측이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월한국군의 철군계획인 ‘주월 한국군 1단계 철군계획 보고’(1971. 11. 24)에서 국방부는 37,860 명을 잔류시키고, 10,000 명을 북귀시키기로 하였는데, 청룡부대 1개 중대를 72년 6월 이후까지 잔류시키려 하였던 최초 계획이 ‘잔류부대를 위한 군사원조 자금의 계속배정과 군간 상호 지원 협정 관계’로 전부대를 철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타 부대가 상당 부분 잔류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해병2여단 전원을 철수 병력에 포함시킨 것은 미군도 문제삼고 있던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파월한국군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여론을 엿보게 하는 두 가지 문건이 등장한다. 하나는 월남군총사령부 정치선전국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는 신문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 일간지로 각각 주월한국군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로 ‘월남신문에 게재된 주월군에 관한 보도’(1971. 1. 25)는 파월한국군이 주민의 재주둔 데모를 일으킬 정도로 “우의에 찬 대민사업”을 펼쳤으며, 자유 아

비서실에서 관련 문건을 작성, 회람 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비서실 외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는 CA000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를 갖고 있는 자료들은 총 68건으로 생산기관이 국방부와 외무부(현재의 외교통상부)로 되어 있다.

17) 박정희는 Lodge로부터 월남사태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는 자리에서 국내정치가 파벌로 인해 어지럽다는 말을 듣고, 한국전쟁 직전에 있었던 숙군에 대해 설명하면서 “군 내부의 숙청을 감행하여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키 수상에 반항하는 군벌이 없도록 미국이 지원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세아의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는(용병설 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으로 철수가 불가피한 정세 속에서 한국군을 좀 더 붙잡으려는 교육지책의 선전 기사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주월한국군 비행에 관한 허위보도(국방부 보고)’(1971. 9. 15)는 “주월한국군들이 월남인 친남매에게 정사 및 부녀자의 수음행위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빈딘성 내 맹호부대 주둔지역에서의 비행 보도로, 조사결과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로 결론맺으면서 한·월 이간과 한국군의 조기철수를 위한 일련의 책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파월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적되고 있는퐁니·퐁넛촌 사건¹⁸⁾등과도 비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남 참전 전상환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보고’(1973. 5. 30)-미측과 협의, 브라운 각서¹⁹⁾에 의한 종결. 73-76년까지의 소요예산액 총 3,118,875 달러 인수,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일당 일인 지원액 6.7달러로 책정. 76년도에는 예상환자 수가 0명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무슨 근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조치로 인해 현재까지 고엽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게 되었다.

대월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문건으로 ‘대월사업 추진현황’(1970. 2. 14)이 있는데, 파월초기인 1965-68, 69년도의 임금현황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달러의 총액은 546,356,000 달러²⁰⁾로 근로자 임금 및 군인 송금, 용역 및 건설, 물품군납, 일반무역 및 전시보험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군인송금의 경우 65-69년에 총 109,053,000 달러로 총 대월사업 임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문건으로는 ‘미국 주간 “타임”지에 게재된 탄피 밀수출 기사 진상보고(국방부. 1971. 6. 8), ‘주월사 팔각정 현판 명명 및 휘호 하사 건의’(1972. 4. 19), ‘파월장병에 대한 면세’(1970. 5. 19) 등이다. 또한 ‘월남과병록 목록표’(2), (8)이 관리번호 CA0002737, CA0002740으로 정부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데 총 45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으나, 국방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국방부(합참, 주월사령부, 육본, 공본, 해본 등)

주로 전사관련 자료로서 문서 생산주체는 국방부(합참)·주월한국군 사령부·육·해·공군 본부 등으로 나뉜다. 이들 문서들의 공통점은 한국군의 기본임무를, 공산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월남의 독립과 안전 및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베트남 공산당과 월남 내에 침습한 월맹군을 포착섬멸하여 월남정부의 통제지역을 확장하고 동시에 민사심리전 및 대민지원을 병행하여 한·월 간의 우호증진과 친선유대를 강화하면서 평정사업을 적극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철저한 명분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8) 1999년부터 [한겨레 21]이 보도한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반응은 ‘유사작전 없음’이라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로부터 입수된 주월미군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을 포함, ‘한국군 해병에 의한 잔혹행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3건의 보고서가 파악되고 있다. 당시 윌리엄 로저스(William Rogers) 미국무장관은 주한미대사관에 보고서가 절대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했고, 주한미대사관과 회동한 청와대는 한국 언론매체들에게 비보도를 지시했다. 당시 조사단까지 파견되었지만 사건보고서는 현재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19) 브라운 각서 제 10항에는 “월남에서 발생한 전상상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 1집], 264-266쪽.

20) 시기상의 차이가 있는데, 주한미대사 포터는 1965년부터 1966년까지의 소득 총액이 5억 4천 6백만 달러라고 증언하고 있다. 사이명턴 청문회, 35쪽.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수집·작성한 자료목록표인 ‘월남과병철수철’이 CA00-2737, 2740, 2752, 2753의 고유번호로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741문서 목록표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확인되고 있다. 총 문건 수는 169건이고, 국방부를 비롯, 유관부서가 철군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주종을 이룬다. 주요 작성자는 국방부(장관, 재정국장, 작전과장,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참모총장, 주월한국군사령관 등)이고, 기타 외무부, 문화공보부, 행정처 등이다.

주요문서로는 ‘주월한국군의 제1단계 철수 일반계획’(문서번호:작전952-95), ‘해외 지원비 미측 부담액 지원’(작전952-103), ‘개선문 계획’(작기 370), ‘주월국군 잔여병력 철수’(아이 720-589), ‘북귀 제대세부 편성표’(작전 952-995), ‘월남 참전국 대사회의’(아이 720-555) 등이다.

기타 ‘주월 한국군에 대한 각국여론’ ‘월남전 협상전망’ ‘키신저의 사이공 방문 분석’ ‘주월 한국군 양민학살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 제출’ 등이 있다.

1차자료 생산주체인 주월사령부와 수도사단을 비롯한 예하 부대²¹⁾들이 국방부에 보내는 보고서를 취합,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그대로 영인, [주월한국군 전사자료집]을 총 8권으로 편찬하였다. 가필이 되지 않은 당시 현지부대 보고서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대역사자료편’ 또는 ‘과월군 종합역사 보고서’라는 부제가 각 자료집에 붙어 있으며, 인사, 정보, 군수, 작전 등의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다. 시기가 1965년 10월부터 1967년 6월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후의 1차 자료는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생산문서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해당부서에서 폐기처분되던 관례로 보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중문단에도 확인 결과 이 시기의 보고서 문건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사편찬위원회에서 1차 자료를 토대로 전사를 정리한 후 바로 용도폐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차 자료의 시기적 한정은 1968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을 있는 그대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인사보고서에서 포로 보고란이 있어 수도사단의 경우 정기인사보고 1호(1965. 10-12)에는 베트콩과 베트콩 용의자란이 따로 있어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데, 각각 55명, 229명을 기록, 베트콩 용의자가 무려 4배에 달하고 있다.²²⁾ 이는 주둔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전투가 격화되면서 무장군과 민간인이 따로 구분 없이 작전대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으로, 정기인사보고 4호(1966. 3. 10)에 이르면 포로현황에 아예 베트콩 용의자란이 삭제되어 경계를 없애고 있다.

군수보고서에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병·의무·통신 장비의 경우 품목명이 영문으로 전부 처리되어 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모든 장비를 지원받아 전투를 치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용병’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브라운 각서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은 월남에 파견하는 추가증파병력에 필요한 무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고...”²³⁾ 이는 주월한국군의 장비, 병참지원, 건설, 훈련, 수송, 생필품, 해외군무수당, 주월한국군에 대해 제기될 지도 모르는 여하한 합법적 손해배상 청구와 주월한국군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그들의 현금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위해 재정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차자료를 토대로 역사적인 서술을 한 것으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과월한국군 전사

21) 수도사단을 비롯, 해병여단, 건설지원단, 100군수사령부 등이 보고주체로 되어 있다.

22) 주월사는 정기인사보고 제15호(1966. 12. 1-12. 31)에도 포로현황란에 계속 둘을 구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도 역시 베트콩 용의자가 180명으로, 67명의 베트콩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미국의 대한관계 자료집-사이밍턴 청문회], 22쪽.

1-10권]은 파월당시인 1964년 9월부터 철수시점인 1973년 3월까지 그 때 그 때 간행된 것으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에서의 전투사를 총정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도도 발간하여 전쟁시 상황지도가 남아 있다. 기타 [주월군 통계연보](1967)에서는 파월한국군의 연도별 숫자 변동, 주요 무기 및 장비, 민간인 용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월군의 통계가 자세하게 처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것으로는 전투병인 맹호부대 파견에 대비하여 베트남전의 양상 및 베트남의 역사 등을 서술한 팜플렛 70-19 [월남과 우리 육군 제 1집](1965. 10)이 있다. 여기서는 한국군이 참전해야 하는 이유를 자유세계의 반공 국가 결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북베트남군을 쳐부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계기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는 [파월 육군 종합전사 제 1권](1969)이 있고, [월남전의 전례·전훈·종합집 제 1집](1971), [파월전사 제 1-5권](1967-1970)이 있다. 그리고 [월남전쟁 파월 한국군 전쟁사료 : 전투상보 제 1집-제30집](1992-2002)은 당시 자료를 다시 정리, 시제별로 배열한 것이다. 해병대 사령부와 해군 본부 발간 자료로는 [해병전투사 제 3집: 월남편 제1권, 제3권](1968, 1977), 공군본부의 것으로는 [월남 항공전 분석](공군본부 정보부, 1973)이 있다.

기타 주월한국군 사령부의 [월남전 종합연구](1974),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술](1969), [주월군 전투제원:파월 이래-1969. 3. 31], [주월군 통계연보 부록](1969. 4. 30) 등이 있다.

증언자료집으로는 그동안의 구두 증언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2, 3](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1-2003)이 있다. 주월한국군 사령부, 수도사단인 맹호부대, 건설지원단인 비둘기 부대, 100군수사령부인 십자성 부대, 해군수송대대인 백구부대, 공군지원단인 은마부대 등에 복무했던 참전군인들을 대상으로 1966년에서 1970년까지 수집한 구두증언 자료이다. 대부분의 참전자 구두증언이 그러하듯이 부대의 전과확대와 개인전공 선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므로, 구두증언은 반드시 1차자료 및 다른 사람의 그것과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

3)국회

국회기록보존소에는 월남파병에 관한 국회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이 있다.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심사의뢰를 받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데, 사안의 성격상 해당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 형식을 빌기도 한다. 심사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결과가 보고되고, 이를 국회의장이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전체의 동의를 받는데, 최초 비전투부대 파병 시에는 상임위와 전체회의에서 거의 반대 목소리가 없었던 점²⁴⁾은 흥미롭다. 국회는 장차 미국의 요구가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의안처리상황표’에는 일목요연하게 제목과 제안자, 제안일시, 부탁(상임)위원

24) 제44회 국회의결(1964. 7. 31)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소수의견의 요지는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장교수당을 감액하여 사병수당에 증액하자”는 것으로 아예 한국군의 파월 자체에 대한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47회(1965. 1. 26)에 이르러서는 “(파병은) 현 단계로서는 국토방위에 차질을 가져 온다는 이유... 헌법상 의용군을 파견하여야 하므로 본 안건은 당분간 보류하자”는 파병반대 목소리가 비로소 제기되는데 이 의견 역시 소수의견으로 처리, 원안통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정식군인의 해외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비로소 찬성론·신중론·반대론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이게 된다.

회, 의결결과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해당 부서인 국방부로부터 ‘동의요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동의주문, 동의요청 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별지에는 월남정부 및 미국과의 협의 또는 합의내용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월남정부로부터 전달받은 한국군 파월요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주요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제44회 13차, 1964. 7. 31)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안’(제47회 7차, 1965. 1. 26)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제 50회 10차, 1965. 6. 21)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제 52회 11차, 1965. 8. 13)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제 55회 14차, 1966. 3. 20)

기타 문건으로는 ‘월남공화국 특별시찰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국회운영위, 1965. 1. 19. 정일형 외 17인 제안. 의원 선발 국방위에 위임)

‘주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안, 1966. 7. 1)²⁵⁾

4)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외무부의 베트남전 관련문서는 외교사료과에 소장되어 있고, 정부기록보존소에 월남참전국 회담 등 1966년 이후의 문서가 일부 복사, 보관되어 있다.

당시 외무부는 파병이 새로이 전개하고 있던 대 중립국 적극외교 시기여서 일각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지역안보협력의 차원에서 이를 연결, 1966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 동년 제1차 ASPAC 회의 개최 등에서 그 의의²⁶⁾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개입 주도로 절정을 이룰 때의 애기로,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NATO식의 군사안보체제의 성립 제기 등의 구상도 각 국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외교적인 성과는 한낱 거품에 불과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비난하던 제3세계 등 비동맹권과도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외교문서 목록집이 1960-1964가 한 권으로 묶여 있고²⁷⁾, 이후 매년 단위로 정리되는데, 주제별 색인 목록의 형태를 갖고 있다. 1972년까지의 목록이 확인되는데, 이 시기의 모든 자료가 마이크로 필름화되어 있다. 마이크로 필름에 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C 그룹으로서 방문·방한외교의 인사방문, 외교정책, 외교관계회의 등의 문건이 들어 있다. 다음으로 J 그룹으로서 군사·외교분야의 양자조약 문서이고, G 그룹은 안보·군사외교·상호방위협력체제 구성 등의 내용인,

25) “우리 국회는 전국민의 이름으로 사의와 위로를 ... 자유와 정의의 십자군으로서 집단안전보장에 참여...”

26)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1990), 127-131쪽.

27) 이 시기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따로 정리한 [문서원본 목록(1960-1964)]이 있다. 마이크로 필름의 롤 번호가 영문 이니셜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04741.83VT 한·월남 무역협정(1962. 12. 19) 조-0002, 0005, 0007

86 729.12VT Khanh, Nguyen 월남혁명위원회 위원장 겸 수상의 대한지원 요청서한(1964. 7. 15) 원-0002 (이 문서는 국방부가 1964년 7월 23일,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인용한 문서로 국회자료인 의안처리상황표에 첨부되어 있음)

131 741.13VT한·월남간 주월한국군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 교환(1964. 10. 31) 조-0005

M과 N은 국제경제·경제협력·통상진흥 등의 경제조약과 실행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O 그룹의 경우 베트남 파병에 따른 국제 여론 및 당시의 국제정세 등에 대한 보고가 들어 있다. 기타 P 그룹의 경우 재외국민 보호·육성 문서가 들어 있는데 베트남 주재 한국 교민의 현황과 전쟁 종결 시 교민 철수 문제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제별 문서 분류보다는 FRUS와 같이 국가별로 중요문서를 편집, 문서집으로 편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시기별로 문서가 나열되어 있기는 하나 온갖 자료들이 체계없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68년 4월 17일에 호놀룰루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주미 대사관의 미국내 언론반응 보고가 일정한 체계없이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당시 국내 신문 보도자료들도 별다른 코멘트없이 스크랩만 되어 있다. 그리고 원본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마이크로 필름 판독이 어려운 문서가 많이 있는데, 외무부와 대사관 사이의 문서만이라도 정리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연도별 중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일련번호와 분류번호, 문서철명, 마이크로 필름 롤 번호(file no.) 순서로)

K C I

<표 1> 월남파병관련 외무부 중요자료

연도	일련번호와 분류번호	문서철명	마이크로 필름 롤 번호(file no)
1962	787724.11US	박정희 대통령 미국방문 1961. 11	file no. 05
1964	891729.12VT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G-0002
	1089 741.13VT	한·월남간의 주월한국군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J-0010(06)
	1097 741.14	(주월한국군 지원을 위한) 한·월· 미 간의 군사실무 약정	J-0010(14)
1965	1482-83724.11US	박정희 대통령 미국방문 1965. 5. 16	C-0011
	1574 741.13VT/14	주월군사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한· 월 군사실무자 약정	J-0024(04)
	1653 761.311VT	한·월 경제각료회담. 1차. 서울	M-0005(03)
	1677 765.54VT	대월남 군수물자 수출 교섭	N-0004(05)
	1683 772VT	한국군 월남파병 및 이에 대한 각국 반응	O-0022(04)
1966	1810 723.3XB	월남문제에 관한 전 아시아평화회의 개최 제의	C1-0017(06)
	1816 724.11VT	박정희 대통령 월남방문, 10. 21	C-0016(16)
	1826724.12US	J. Lyndon B 방한, 10.31-11.2	C-0017(10)
	1833724.32US	Rusk, Dean 미국무장관 방한, 7.8-9	C-0017(17)
	1834724.32VT	Do, Tran Van 월남외무장관 방한, 10.8-12	C-0017(18)
	1840724.62US	Lodge, Henry C 주월미대사 방한, 5.19-20	C-0017
	2033765.54VT	대월남 군수물자 수출교섭	N-0005(06)
1967	2156724.12US	Humphrey, H 미부통령 방한, 3차, 6.29-30	C-0022(13)
	2326741.23VT	한·월 군대구성원에 대한 공무수행 중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 한 청구권 협정	J-0043(02)

연도	일련번호와 분류번호	문서철명	마이크로 필름 롤 번호(file no)
1968	2357722.4121	ASEAN 창설 및 제2차 각료회의	C-0024(30)
	538-40 722. 4121	ASPAC 각료회의, 제3차, Canberra, 7.30-8.1	C-0025(31,32)
	2577-78 724.11US	박정희 대통령 미국방문, 4.17-19	C-0027(06)
	2605724.62US	Bundy, William P.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7.22-24C-0028(19)
	2662-69 729.55	1·21 무장공비 침투 및 Pueblo호 납북사건	G-0011(08)
1969	3012723.3XB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 3차, 방콕, 5.22	C1-0022(02)
	3017-19 724.11US	박정희 대통령 미국방문, 8.20-25	C-0033(01-03)
	3035-37 724.12VT	Thieu, N. Van 월남대통령 방한, 5.27-30	C-0034(07-09)
	3042724.32US	Rogers, W. P 미국무장관 방한, 7.31-8.1	C-0035(02)
	3100729.21US	한·미 국방각료회담, 제2차, 서울, 6.3-4	G-0012(11)
1970	3510-11 723.3XB	월남참전 6개국 외상회의, 사이공, 7.5-6	C1-0023(06-07)
	3659729.439VT	주월남 연합군 철수	G-0019(10)
1971	3943722VT	월남전 포로송환 문제	O-0029(02)
	4716722VT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송환	C-0031(16)
1972	4906722.31VT	재외공관철수(주 Da Nang 임시분관, 11.1	C-0052(15)
	5142729.22	주월한국군 경비관계 대미교섭	G-0025(15)
	5631791.42VT	재월 한국 민간인 철수계획	P-0011(13)

3. 맺는 말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자유수호의 대상이었던 월남공화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고, 적으로서 전선에서 마주했던 베트남 정부와 수교한 지도 1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베트남전 주요 개입국이었던 미국조차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도 역사적인 재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1차자료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기록물이 그러하듯이 베트남 파병관련 문서가 일정한 수집·이관·보관체계 없이 산재, 또는 유실된 상태이다. 국방부 문서의 경우, 어떤 관련 기관에서도 8권의 영인본 외에 당시의 1차 문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미 대부분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간혹 당시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부서의 생산문서가 얼마나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는 중요 1차 자료를 선별, 자료집으로 편찬하고,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전 관련 문서가 하나의 주제로 묶일 필요가 있다. 박정희의 시기상조 성격의 파병제의조차 미국

의 외교문서에서 밝혀지고, 이를 근거로 과병역사를 다시 쓰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외국, 특히 미국의 관련 문서도 수집, 보완되어야 한다. 한국과 관련,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정책결정과정, 한국군 파병요청 배경과 협의 내용, 주월미군과 주월한국군의 관계, 주월한국군에 대한 군수 및 장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항목, 예산책정과 집행, 철군의 배경과 미국정책의 변화, 주월미군 철수와 주월한국군의 철수 과정 등을 밝힐 수 있는 미국측 문서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K C I